

「2021년 3월6일 제1차 경찰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및 정답(3)

| 편집 : 고시기획 | 출처 : 경찰청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 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16.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17.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 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② 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정보(보안) 소관의 정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생활 안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 ③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기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기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비상 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 ④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 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 ③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nC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출국이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1항)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20.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음주 후 자신의 차(처는 술을 마시지 않음)와 동승한 채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단속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까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결국 甲은 경찰관에게 제지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甲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이후 2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 ①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처에게 甲을 인계 하였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甲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甲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 ③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148조의2제2호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 ④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행한 음주측정요구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답 】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①	③	③